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와 한반도에 주는 함의

Online Series

2020.11.05. | CO 20-28

이재영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

미중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서방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이 회의에서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가 통과되었다. 중국은 2021년 소강사회 건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2049년 부강하고 민주 문명화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은 미국을 의식하여 '중국제조2025'와 '군민융합'과 같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정책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대신 빈곤 퇴치 및 발전과 안전의 균형을 중시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내수 육성, 과학기술 자립자강, 환경보호라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미국과의 무역전쟁 환경 속에서 수출보다 내수에 더욱 집중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탈중국 경제네트워크에 대응하여 인공지능과 반도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중점으로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중국 경제 구조의 변환에 대응하여 중국 기업과 지나친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보다 협력의 여지가 많은 문화산업, 환경산업,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을 강화하고, 밀착된 북중관계를 활용하여 환경보호와 의료방역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이하 19기 5중전회)를 개최했다. 전체회의의 주요 의제는 14차 5개년 계획(十四五)을 심의하고 2035년 중장기 목표를 점검하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미중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중장기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국이 앞으로의 5년과 15년의 전면적인 소강사회 실현 및 두 개의 백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를 좌우한다.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으로 국민경제 발전 가속화와 각종 제도 완비를 통한 중국의 소강사회 건설 목표 달성의 마지막 해이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하는 2035년 장기목표를 제시함으로써, 2035년 장기목표를 두 번째 백년이자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의 목표, 즉 ‘부강하고 민주 문명화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 실현을 위한 도약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2035년부터 2049년까지 목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된 14차 5개년 계획을 토대로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여러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9기 5중전회는 중국 대내외적으로 볼 때 중국의 향배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이러한 향배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다.

중국의 중장기적 목표 설정: 빈곤 퇴치와 총체적 국가 안보

지난 18기 5중전회는 전면 소강사회 건설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 중고속 유지, 2010년 대비 도시와 농촌 주민 평균 수입 두 배 상승, 산업고도화, 소비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확대, 호적인구 도시화를 가속화, 농업현대화 진전, 인민생활수준 제고, 농촌 빈곤 인구의 빈곤 탈피, 국민 소질과 사회문명 수준 제고, 생태환경 질 개선 등 구체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각 방면의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추진을 강조했다.

이번 19기 5중전회에서 제시한 2035년 장기목표(远景目标)는 중국의 경제 실력, 과학기술 실력, 종합 국력의 비약적인 발전과 경제 총량 및 도시·농촌 주민 평균 수입의 새로운 단계로 상승, 관건 핵심기술의 중대한 돌파 실현, 혁신형 국가 진입, 현재 1만 달러를 조금 넘는 1인당 GDP가 2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는 중등 선진국에 도달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특히 19기 5중전회에서 주목해야 할 목표는 빈곤 퇴치이다. 올해 양회 기자간담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에 월수입이 1,000위안(한화 약 16만 8천원)이 되지 않는 인구가 아직도 6억 명이나 된다고 빈곤 탈출 성과 부족을 개탄했다. 2011년 이래 중국은 빈곤선을 농민 연평균 수입 2,300위안(한화 약 38만 7천 원)으로 정했다. 2011년 빈곤선이 1,274위안에서 2,300위안으로 상승하면서 농촌 빈곤 인구수는 2,688만 명에서 1.28억 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19년 말 기준 빈곤 인구는 551만 명으로 줄었다.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 시기 5,575만 명의 농촌 빈곤 인구가 빈곤에서 탈피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러한 빈곤 퇴치 성과를 농촌 특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동부 지역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빈곤 퇴치의 성과를 확대하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중국의 빈곤선 기준은 국제적 빈곤선인 하루 1.9달러의 절반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중국의 빈곤선을 국제적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상향할 경우 빈곤 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9기 5중전회에서 강조된 또 다른 목표는 바로 발전과 안전의 균형과 통합이다. 즉 시진핑 정부 들어 부각되고 있는 종합적인 국가 안전관이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전쟁의 대내외 악재 속에서 기존 군사안보 분야에 국한된 안보관에서 탈피하여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의 종합, 국가 발전 각 영역과 전 과정에서 안전실현, 중국 현대화 진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험 예방과 해소, 국가안전체계와 능력 건설 강화, 국가경제안전 확보, 인민생명 안전보장, 사회 안정과 안전유지의 종합적인 국가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초래한 경제안전의 위협과 코로나19가 야기한 인민생명 안전위협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것이다.

14차 5개년 계획: ‘중국제조2025’의 또 다른 버전

중국의 5개년 ‘계획(规划)’은 과거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대의 ‘계획(计划)’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국 계획경제 시대의 ‘계획(计划)’은 국가가 사회 모든 경제 부문을 통제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명령형 계획’이라면, 장쩌민 시대 이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대의 ‘계획(规划)’은 국가가 경제의 핵심 영역과 소유권(국유)을 통제한 후 나머지 영역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는 ‘지도성 계획’이다. 따라서 14차 5개년 계획은 국가가 5년 동안 경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과 규칙에 따라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고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규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5개년 계획의 역사적 분기점을 살펴보면, 1차 5개년 계획(计划)은 신 중국 공업 기초를 수립했고, 6차 5개년 계획(计划)은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갔으며, 8차 5개년 계획(计划)은 시장 경제를 포용했다. 11차 5개년 계획(规划)은 최초로 계획(计划)에서 계획(规划)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졌고, 13차 5개년 계획은 5대 발전이념인 혁신(创新), 조화(协调), 녹색(绿色), 개방(开放), 공유(共享)를 제시했다.

이번 14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우선 중국의 현대화가 더 이상 노동 집약형 산업의 발전만으로 실현되기 어렵고, 과학기술 진보와 산업고도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지난 2개월 동안 기업가, 경제사회 영역 전문가, 과학자 등 전문가들과 7차례 좌담회를 거쳐 14차 5개년 계획의 기초를 잡았고, 새로운 발전 틀 구축, 관건적인 핵심기술 공략, 인민건강의 전방위·전주기 보장 등의 주요 표현을 만들었다.

특히 5G, 집적회로, 바이오 의약 등 중점 영역이 국가특별계획에 포함된다. 이러한 영역은 또 다른 ‘중국제조2025’가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분야에서 기업이 핵심기술 돌파를 이루어 내도록 견인하고 중점 과학기술 특별계획과 제조업 고도발전 특별계획 등을 통해 핵심 기술과 제품 공략을 강화하며, 기술 영역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 때도 특별계획과 관련 조치를 통해 전통 산업의 고도화와 신흥 산업의 견인 작용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79개의 스마트 제조 국가표준을 제정했고 676개의 디지털 스마트 공장을 건설했다. 한편 중국은 이번 계획에서 미국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중국제조2025’ 대신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을 강조했다.

1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특징은 과거 5개년 계획은 연간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즉 중국은 13차 5개년 기간 6.5%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실제 경제 성장률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5% 정도의 성장률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0년 GDP를 2010년의 두 배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코로나19와 무역전쟁과 같은 대외 악재를 만나면서 올해 성장률이 2~3%로 전망되면서 목표 도달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올해 5.5% 정도의 성장률에 도달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이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19기 5중전회가 끝난 후 14차 5개년 계획의 요약본(건의)이 발표되었고, 전체 계획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친 후 정식 공표될 전망이다.

중국 경제 구조 변환의 동력: 내수 육성, 과학기술 자립자강, 환경보호

중국은 서방을 포함한 외부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창궐하는 가운데 당분간 ‘쌍순환(双循环)’에서 내수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즉 중국은 “국내 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와 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틀을 확립했다.

구체적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 서비스 소비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까지 증가한다면 10조 위안의 새로운 소비 증가가 발생하고, 도농일체화가 효과를 발휘하고 호적인

구 도시화율이 현저하게 제고되면 다시 10조 위안의 투자와 소비 수요가 따라올 것이다. 이러한 내수 잠재력만 지속적으로 발휘된다면 대외 개방과 국제 대순환의 중요한 견인 동력이 될 수 있다. 국내 공급만으로 확대된 내수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산업고도화에 외부 경쟁을 도입한다. 또한,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상품, 자본, 인재 등 요소의 외부 순환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쌍순환은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큰 자본시장 순환도 포함된다.

국내 수요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의 지속적인 확장고도화가 확보되어야 한다. 소비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계층이 바로 농민공으로 약 2.7억 명의 농민공이 도시 시민이 되면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농민공이 도시 시민처럼 소비한다면 전국 1인당 소비 지출은 약 27%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호적 제도 개혁이 전제되어야 하고 도시와 농촌의 기본 공공서비스가 균등화되어야 한다. 또한, 쌍순환의 핵심은 도시와 농촌에서 양방향으로 인구가 유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토지, 인력, 자본, 기술, 데이터 5대 요소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한다. 요소의 시장화 개혁은 토지 요소의 도시와 농촌 유동 추진 가속화, 토지이용 집약화 수준의 제고, 인적 자원 중시와 기업가 시장의 완비, 주식시장을 포함하는 자본시장의 최적 배치, 기술 재산권 거래시장 통합 가속화, 데이터 시장 건설 및 자본시장과의 융합 발전 등을 포함한다. 국유기업 개혁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지양하고 자본을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의 국유자산 감독체제를 건설하며, 국유경제 배치의 최적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국유기업 효율 제고, 혼합소유제 등 개혁을 지속한다.

중국은 이번 계획 기간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발전 전략의 토대로 제시했다. 혁신을 지지하는 과학기술형 기업정책 체계 수립, 과학연구소와 연구형 대학 강화, 공생 기초기술 공급체계 완비, 베이징·상하이·웨강아오다윈취(粤港澳大湾区)에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중점정책으로 정했다.¹⁾ 특히 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회로, 바이오헬스, 뇌 과학, 생물육종, 항공우주 과학기술, 심지심해(深地深海)의 8가지 선진·전략적 국가특별과학기술 항목을 정해, 집중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내세우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마중 기술 패권전쟁과 전략적 갈등 때문이다. 화웨이를 대표로 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1) 홍콩, 마카오의 두 특별행정구와 광둥성의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포산(佛山), 후이저우(惠州), 동관(东莞), 중산(中山), 장먼(江门), 자오칭(肇庆)의 9개 도시가 포함된 주강삼각주 도시권역이다. 이는 중국에서 개방도가 가장 높고, 경제 활력이 가장 높은 권역 중 하나로 국가 발전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총면적은 5.6만 제곱킬로미터, 2018년 말 기준 총인구는 7천만으로 이 권역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기도 한다.

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반도체를 위시한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개발함으로써 산업고도화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이번 5개년 계획 발표 이전에 시진핑 총서기는 206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생태환경보호 방면에 큰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지만,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즉 중화학 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석탄 발전 중심의 에너지구조, 마지막으로 도로 위주의 운송구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환경 전문가들은 중국 환경보호 정책에서 미세먼지 PM2.5의 대폭 감축과 같은 성과를 인정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대기 질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많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수자원 생태 보호, 토양, 농업·농촌 생태환경 보호 등 영역에서 광범위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환경보호 토대가 빈약하다는 평가가 팽배하다. 중국은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회의 이전에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환경보호 구역 지정과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자동차공업학회는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차량 기술 로드맵 2.0>을 제안했다. 이 로드맵은 2035년까지 화석연료로만 움직이는 자동차를 없애고, 순수전기차를 포함하는 친환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중국 내 판매 비중을 각각 50%까지 끌어올리며, 특히 수소전기차 보급량을 백만 대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중국 국무원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친환경 자동차 산업발전 계획을 발표하여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가 2025년 전체 판매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처럼 중국이 다른 영역에 앞서서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에 서두르는 이유는 친환경차 분야가 중국이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즉 환경과 경제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 섹터이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구조 변환의 수단: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 강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정치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업무조례(이하 업무조례)> 추인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업무조례를 심의했다는 것이다. 이 업무조례는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강화하고 다섯 번째 현대화인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추진에 토대가 되는 문건이

다. 구체적으로 업무조례는 당 중앙의 영도 지위, 영도 체제, 영도 직권, 영도 방식, 정책결정 배치, 당 중앙 건설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중앙위원회 업무 강화에 기본 틀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전체회의 공보는 당의 전면 영도를 견지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당의 영도 체제와 기제를 견지하고 완비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업무조례가 이번 회의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이 업무조례에서 두드러진 것은 중공중앙 총서기가 중앙정치국 회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중앙서기처 관공실 회의, 당 중앙 의결 및 의사조정기구 회의의 4대 최고위급 회의 의제를 확정하는 유일한 권한을 보유한다는 조항이다. 이를 통해 시진핑 총서기는 국가의 중요 의제 및 의결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최고 권한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번 업무조례 이전에도 총서기의 권한은 막강했지만, 이 업무조례를 통해 총서기의 유일한 권한을 명문화함으로써 총서기의 최고 권력을 합법적으로 정당화한 것이다. 이로써 시진핑은 헌법 조항에서 국가주석 10년 연임 제한을 철폐한 뒤 이번 업무조례에서 당 총서기의 권한까지 강화함으로써 당·정의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로 등극했다. 시진핑의 권한 강화는 향후 대내적으로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에 변화를 불러오고, 대외적으로 미·중 간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내부결속을 다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혁신과 과학기술 자립자강 목표는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생각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권력에 대한 비판이 탄압받지 않을 때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에 핵심적인 과제는 어떻게 ‘정치적 자유화’ 없이 혁신과 과학기술 자립자강 목표를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번 19기 5중전회에서 제시된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계획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와 총서기의 권한 강화, 그리고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두 가지 다소 모순된 과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묘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한반도와 북한 경제에 주는 함의

중국의 경제발전과 구조 변환의 핵심이 내수 집중, 과학기술 자립자강,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로 옮겨가면서 우리에게도 다양한 기회가 열렸다. 중국이 내수 육성에서 가장 중시하는 점은 산업고도화, 취업률 제고, 도농 균형발전, 중서부 지역발전, 복지제도 완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이다. 한국은 그린뉴딜과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산업과 섹터를 발굴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9월 23일 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 북한과 중국·일본·몽골에 제안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와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중국 내수 개발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중국 기업들과 지나친 경쟁관계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화석연료(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산업 섹터보다는 문화산업(K-Pop), 바이오산업과 환경산업(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등 아직 양국 기업들의 잠재력이 완전히 발휘되지 않은 섹터를 위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생명안전공동체와 동북아시아 방역 및 보건협력체,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한중 방역 및 의료,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중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 속에서도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첨단기술 자립 정책이 우리의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위협 요인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중국이 이른 시기에 한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은 대체 수출 시장을 찾아야 할뿐만 아니라 미·중 각자가 주도하는 공급망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 요인도 한중 간 환경 협력을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60년, 한국은 2050년을 탄소중립화의 해로 정했다. 물론 목표 설정에 있어 우리가 10년 앞서나가는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에 있어 한중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에너지 구조가 기존 석탄화력 발전에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하는데 한중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역시 산림훼손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한중 간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사업을 북한과의 환경협력 사업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재해, 대북제재로 인한 삼중고를 겪으면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와 중국의 후원을 통해 자력갱생과 자원절약으로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국경 봉쇄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 북·중 무역도 회복 중에 있지만 예년 같지는 않아 북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여 북중 간 밀착된 관계를 활용해 남·북중 방역 및 경제협력과 환경보호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갈등을 의식하여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자극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빌미가 되는 ‘군민융합’과 ‘중국제조2025’를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다자무역 체제 수호, 세계무역조직 개혁에 적극적 참여,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 세계 경제 거버넌스 체계 완비 추진, 전 세계를 지향하는 높은 표준의 자유 무역구 네트워크 건설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탈중국 경제네트워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또한, 19기 5중전회 기자회견에서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한원시우(韩文秀)는 “미·중이 철저히 탈동조화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 미·중의 경제 연계는 양국 경제 구조의 상호 보완성과 전 세계 경제의 개방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즉 중국은 19기 5중전회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보다는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제시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원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산업고도화와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 영역에서의 국제협력 및 환경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는 중국과 더불어 북미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미·중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서 갈등 요인보다 협력 요인이 더 많다. 중국은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역시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중의 공감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협조를 도출하고,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양자 및 다자간 경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북미 협상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KINU 2020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